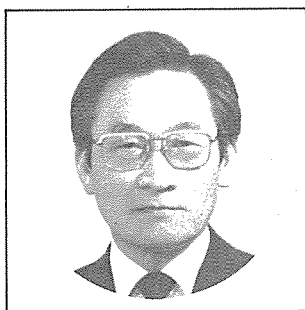


“政策담당자·政治人의 前向的 자세 期待”

— 「科學技術」 80년대를 보내며



趙完圭
(서울대학교 總長)

1979년 10월 26일 大統領 시해사건이 있는 뒤 이어진 1980년은 政治, 社會의 기존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진, 그래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때였다. 그 때문에 그간 점진적으로 성장해 온 經濟가 하루 아침에 마이너스 성장의 국면을 맞기도 하였다.

거의 無政府상태에서 國民들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향없이, 불만과 욕구가 한꺼번에 터졌고 끝내는 光州事態가 야기되는 등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第5共和國이 들어서면서 時局의 위기감을 지니게 된 國民들은 그 體制에 순응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따라서 經濟여건은 다시 제자리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면서 國家發展의 원동력이 科學技術의 진흥에 있음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義務적인 第5次經濟社會發展 5개년계획이 마련되었다.

특히 科技處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技術드라이브政策이 마련되었고, 科學技術投資에 관

심을 갖게 되었다. 國策研究課題의 도출을 위한 研究作業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로 尖端技術과 관련된 여러 분야가 重點育成分野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 작업이 政府主導가 아니라 學者, 企業人 등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國民의 共感帶形成에 크게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다.

科學技術開發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고 인식한 政府는 國家元首가 주재하는 技術振興擴大會議을 구성하여 問題點도출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창출하는데 큰 공헌이 있었고, 또 政策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相關部處 次官, 民間機構, 學者들로 구성된 技術振興審議會를 大統領 밑에 두어 研究開發投資調整活動을 하는 등 歷代政權보다 義務적으로 科學·技術의 진흥을 위해 노력한 政權이었음은 틀림없다.

1980년대초 GNP대비 研究開發投資率이 0.5%에 불과했던 것이 1986년에 1.8%, 그리고 1988년에는 2.3%가 되는 등 研究開發投資量이 크게 증대된 것도 연구풍토를 정착하게 하는데 크게

“1980년대를 보내면서, 그리고 2000년대를 바로 앞으로 내다보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科學技術振興政策이 옳게 자리를 잡지 못할 경우 결국 龍이 지렁이로 되돌아가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기여했다.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研究効率성을 높일 목적으로 出捐研究機關의 통폐합이 강행되었으나 결국 뜻대로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문제점만 더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事前에 충분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企業體들은 각종 研究組合을 구성해서 서로가 취약기술에 대한 공동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큰 뜻이 있다고 하겠다.

1980년대 中盤에 先進國들의 끈덕진 압력으로 인해서, 아직도 自體技術開發能力이 없는 상태임에도 할 수 없이 物質特許制度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또 知的所有權認定制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先進國들의 技術保護장벽이 더욱 더 높아감에 따라 큰 企業體는 물론 中·小企業體들까지도 自體技術開發力量을 확보할 목적으로 研究所 설립붐이 일어났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40여개 소였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600개소가 넘는 研究所를 갖게 되었다.

이같은 경향은 企業體의 自救的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하겠으나, 政府主導의 科學技術振興政策의 구현은 오히려 統治者의 권위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때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政策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試行錯誤를 겪는 수 밖에 없었다.

1980년대 뒤늦게 우리는 비로소 基礎科學育成的 긴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5共 때 처럼 쉽게 사울 수 있었던 技術을 기반으로 해서 輸出 드라이브政策을 추구하고 왔다면, 6共에 와서는 이미 國際與件이 전처럼 쉽지 않음을 알게 된 때문에 결국 技術革新能力을 함양할 基礎科學의 육성없이 다시 낙후할 수 밖에 없다는 절

박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國家元首 뿐 아니라 野黨黨首마저도 基礎科學振興의 艱박성을 강조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89년에는 부족한 研究人力, 제약된 투자의 우선분야, 研究開發支援行政體制, 人力養成의 체계, 研究財源의 발굴, 研究開發關聯部處간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大統領에게 직접 諮問할 科學技術諮問會議를 설치함으로써 현단계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진흥 정책이 그 內實을 거둘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를 보내면서, 그리고 2000년대를 바로 앞으로 내다보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科學技術振興政策이 옳게 제자리를 잡지 못할 경우 결국 龍이 지렁이로 되돌아가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제 누구나 모두 국제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적인 첨단기술에 의존해야 하지만 그것은 화려하고 꿈같은 政策口號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企業體마다 研究所는 있어도, 또 값비싸고 정밀한 연구용 기기를 갖추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研究는 사람이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또 오늘날 모든 研究所가 익숙한 研究人力難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국 良質의 研究人力을 양성할 大學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先行됨으로써 그 문제가 풀리게 된다. 바로 그같은 投資나 支援이 基礎科學育成的 첫번째 길인 것이다.

엊그제 1989년도 제2회 科學技術振興會議에서 표명된 大統領의 基礎科學育成에 대한 굳은 意志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政策擔當者나 政治人들의 前向의 자세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자 한다.